

우유수급현황과 소비확대방안

-일본의 사례 중심-



조 석 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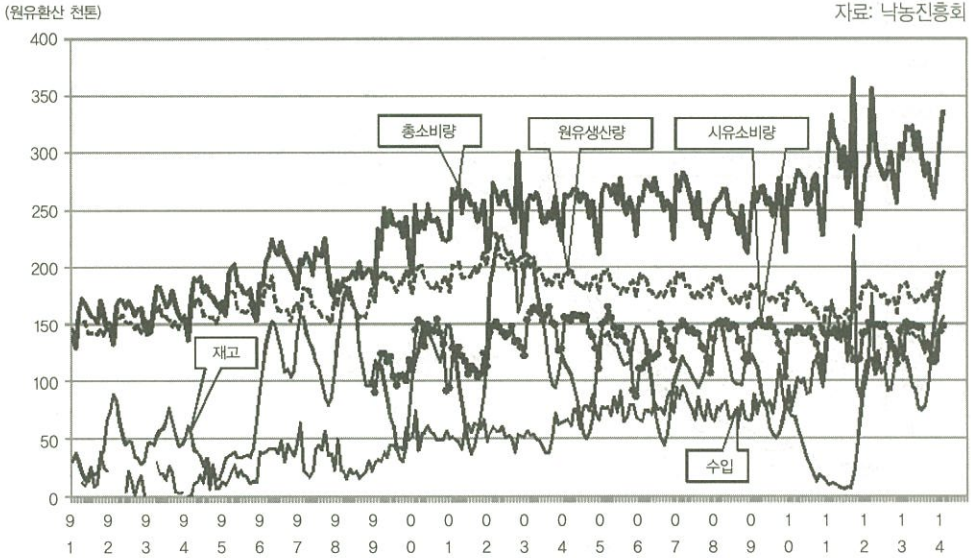
최근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분유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낙농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이며, 금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원유수급불균형을 야기한 수요측 요인으로는 2003년 이후 지속되어 온 시유의 소비정체 내지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는 차음료, 과일쥬스, 생수 등과 같은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과 함께 최근의 경기침체 및 근거가 희박한 안티밀크 정서까지 가세하면서 시유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급측 요인으로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과 기후요인을 들 수 있다. 즉,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에 따른 유대인상으로 원유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후요인으로는 2013년 동절기의 온화한 기후로 인해 산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과 같은 하절기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유량이 예년에 비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 EU를 포함한 유제품수출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이 발효됨에 따라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점차 인하되고 있다. 그 결과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저가의 유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시유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 우유수급상황(1991~2014. 5)

국내 낙농을 둘러싼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최근 낙농산업의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유수급불균형은 2000년대 초와 비교해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대 초에는 낙농진흥법개정을 전후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수급조절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시유소비는 미미하게나마 증가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시유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제품수입과 관련한 국경조치 또한 지금보다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원유수급불균형과 관련한 대책과 처방 또한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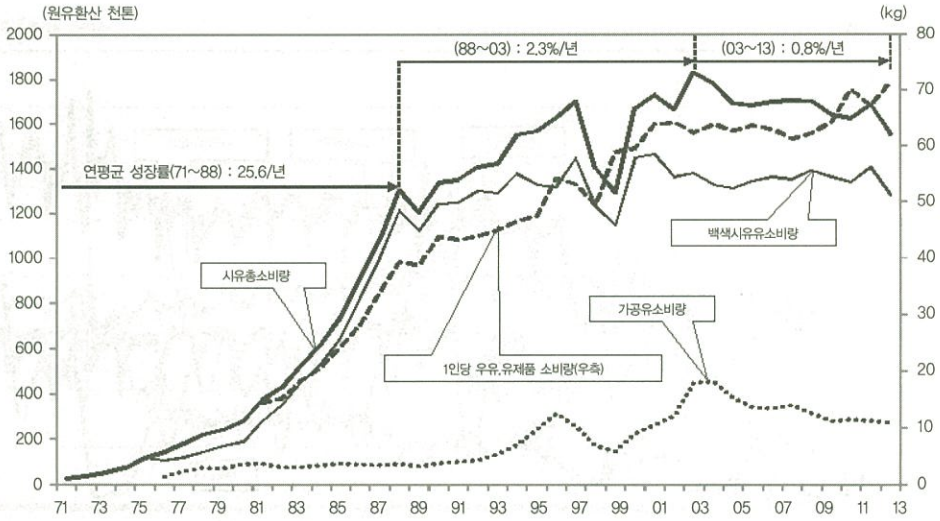
본고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우

리와 유사한 식생활패턴 및 생산여건을 지닌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후의 전망과 해법에 대해 살펴본다. 이하 2에서는 국내의 수급상황에 대해, 3에서는 일본의 경험 및 시사점에 대해, 4에서는 낙농산업의 수급안정방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2. 수급상황

〈그림 1〉은 지난 약 23년간(1991~2013. 5월)의 낙농부문의 수급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





〈그림 2〉 시유 및 유제품 소비의 변화(197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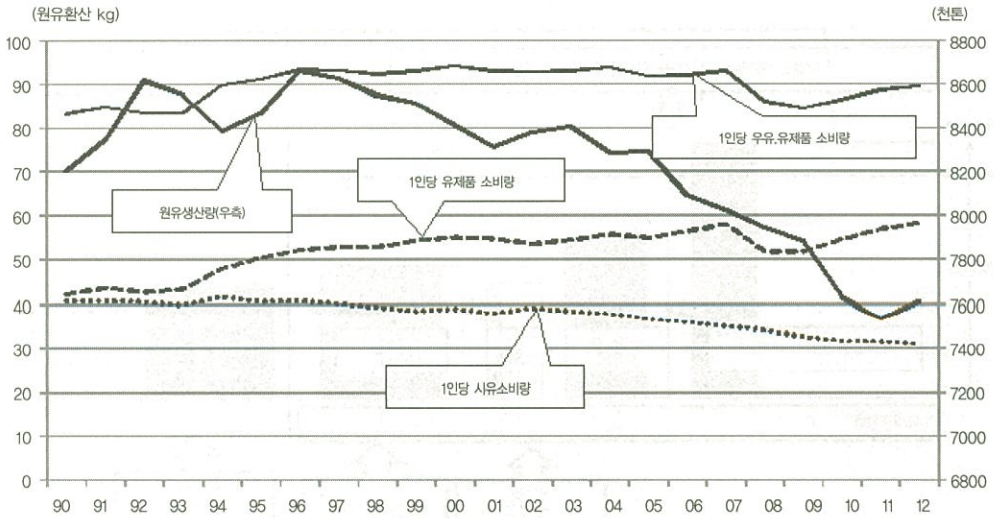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년을 기점으로 유제품수입이 점차 늘어나면서 총 소비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왔다. 반면 원유생산과 시유소비는 각각 2002년과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런 가운데 2013년 말 이후 원유생산증가와 시유소비감소가 맞물리면서 분유재고가 2000년대 초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그림 2〉는 우유소비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7년간(1971~1988) 국내 낙농은 연평균 25.6%의 높은 시유소비증가에 힘입어 약 4년에 두 배씩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03년까지 시유소비가 정체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2.3%까지 급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2년에 심각한 원유수급불균형을 야기해 마침내 집유주체별 쿼터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시유소비가 더욱 침체되면서 마침내 백색 및 가공시유 모두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2003~2013) 시유 소비는 연평균 -0.8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림 3〉 일본의 원유생산 및 소비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그 같은 상황에서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에 따른 생산자유대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낙농산업은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라는 2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도 우유생산비 상승에 따라 원유 1리터당 25원의 유대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이를 생산자유대에 반영시키지 못했다. 즉, 낙농가는 최근의 원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산비 인상분을 유대에 반영하는 것을 유보한 채 누적연동제에 합의하는 결단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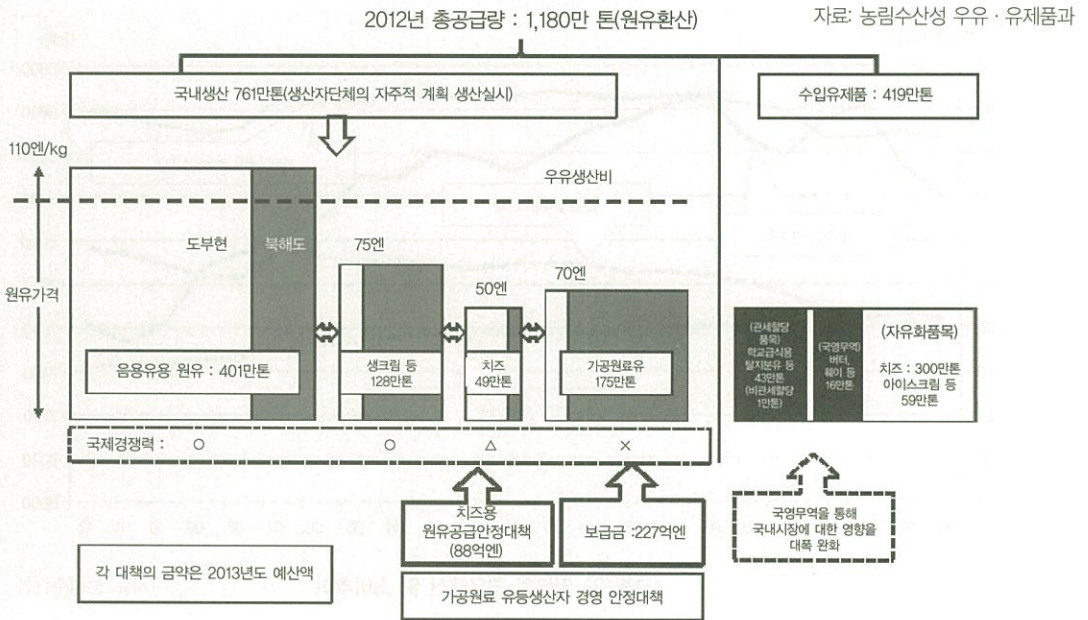
이 같은 최근의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점차 생산기

반 축소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 거의 모든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금후 관세가 점차 인하됨에 따라 유제품 수입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하 국내 낙농이 직면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3.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그림 3〉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의 원유생산 및 우유소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연간 1인당 시유소비와 원유



로 환산한 우유·유제품소비는 각각 1994년의 41.6kg과 2000년의 94.2kg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원유생산도 1996년의 8,658천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16년간(1996~2012) 연평균 -0.81%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한편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지난 11년간(2002~2013) 원유생산이 2002년의 2,537천 톤을 정점으로, 2013년 현재 2,093천 톤까지 감소하여 연평균 -1.73%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의 원유생산이 급감한 배경에는 1995년 이후 시유소비정체와 함께 유제품수입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낙농의 생산 기반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과 같은 한·일 양국의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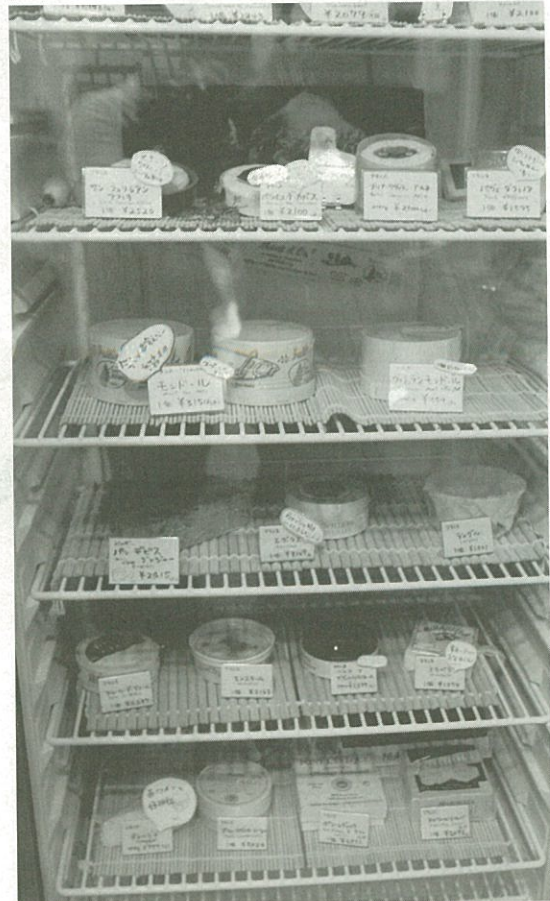
첫째, 연간 1인당 시유소비에 있어서 일본은 1994년의 41.6kg을 정점으로, 한국은 1997년의 37.1kg을 정점으로 각각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연간 1인당 시유소비의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일본은 18년간(1994~2012) -0.57%, 한국은 16년간(1997~2013) -0.63%의 감소를 각각 나타냈다. 즉, 양국 모두 연간 1인당 시유소비가 약 40kg을 전후해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감소속도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약간 빠르게 나타났다.

둘째, 수입을 포함한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소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2000년의 94.2kg을 정점으로, 2012년 현재 89.5kg까지 감소하여 연평균 -0.43%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3년 현재 71.3kg으로 아직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약 90kg 전후까지는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금후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늘어나는 유제품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셋째, 2012년 현재 일본의 우유자급률은 65%인데 비해 2013년 현재 한국은 58.4%에 불과하다. 이는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치즈, 분유, 버터 등 국산유제품생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정된 가공쿼터의 설정 없이 잉여유의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국산유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상 일본의 경험 및 국내의 낙농 현실을 감안할 때 금후 원유 수급균형 유지 및 낙농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지금까지의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시행착오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화에 의한 ‘낙농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주도의 전국단위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원집유 다원판매 및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농가간 쿼터 및 유대의 균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단위 쿼터제 하에서의 효율적



인 원유수급조절 및 가공쿼터의 설정을 통해 치즈, 생크림 등 국산유제품의 생산대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2년 현재 청소년(10~18세)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칼슘섭취 미달비율이 7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초·중·고의 학교우유급식 비율은 52.5%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우유급식이 백색시유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로, 같은 해 일본의 12.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이 통합급식을 실시하는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속히 통합급식을 통해 우유소비를 늘림으로써 제도적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칼슘섭취율 향상 및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생산자단체뿐 아니라, 유업체도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농제도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고 정책이 낙농문제를 안이한 땀질식 처방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쿼터감축에 따른 낙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낙농산업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